

‘초이노믹스’ ... 내수 활성화에 41조원 패키지 마련

- 민간·안전 건설투자 확대 유인, LTV·DTI 등 부동산 규제 합리화 -

박 용 석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yspark@cerik.re.kr

최근 ‘초이노믹스’가 회자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이후 2기 경제팀의 수장인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Choi’와 ‘Economics’를 결합한 단어이다. 우리 경제의 정상화와 성장률 제고를 위해 재정 확대, 금융 및 세제 지원, 부동산 규제 완화 등 다양한 경기 부양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국내 경기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으며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도 세계 경제의 둔화와 경쟁국의 추격 등으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내수 부진의 심화로 ‘저성장·저물가·경상수지과다 흑자’와 같은 경제 왜곡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 성장률 둔화로 기업의 수익성이 저하되고, 고용·임금·소득 둔화가 경제 회복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여 성장과 물가, 수출과 내수, 가계와 기업 등 모두가 위축되어 ‘축소 균형’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우리 경제가 저성장·저물가·자산시장 부진과 같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하지 않기 위한 다각적인 경제 정책이 필요해졌다.

내수 활성화에 총력

정부는 경제 정책 방향을 내수 활성화, 민생 안정, 경제 혁신으로 설정

했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 41조원 규모의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2014년도 하반기에 기금이나 정책 금융 등을 통해 재정 지출을 확대할 수 있는 11.7조원의 재정 보강을 하고, 중소기업 등에 29조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하는 확장적 거시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가계소득 증대세제, 가계소득과 기업소득의 선순환 구조 구축, LTV·DTI 등 부동산 규제의 합리화를 예정하고 있다.

민생 안정에 있어서는 비정규직 처우 개선, 소상공인 지원, 청년·여성 일자리 창출 등을 중점 추진하고, 경제 혁신은 공공부문 개혁, 규제 개혁,

새 경제팀의 경제 정책 방향

내수 활성화	민생 안전	경제 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장적 거시정책 -재정 11.7조원, 금융 29조원 -2015년도 예산도 확장 편성 • 가계소득 ↔ 기업소득 선순환을 통한 소비, 투자 여건 개선 -가계소득 증대세제 -대형 민간 투자 프로젝트, 서비스업 투자 세제 지원 등 기업 투자 촉진 • 주택시장 정상화 / 리스크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정규직 처우 개선 • 청년, 여성 등 일자리 창출 • 노사정 대화 복원 추진 • 소상공인 지원 • 서민 생활 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도 높은 공공부문 개혁 • 규제 개혁 • 유망 서비스업 육성 • 창조경제 성과 가시화 • 경제민주화 추진 • 해외 진출 활성화 • 농업의 미래 산업화 추진

자료 : 관계부처 합동,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 2014. 7. 24.

서비스업 육성, 창조경제 구현 등의 핵심 과제를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대형 민간 투자 프로젝트 추진

내수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민간 투자 프로젝트를 조기에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평택~익산(제2서해안) 고속도로(총사업비 2.6조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3.1조원), 평택호 관광단지(1.8조원) 조성 등의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고, BTL 민간제안 허용과 민간 투자 대상 시설 확대 등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주요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바탕으로 안전투자펀드, 예산 등 안전 투자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모든 민간 시설, 공공기관 관리 시설, 국가·지자체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을 추진한다. 잠정적으로 점

검 대상은 시설물 3만 8,000여 개, 건축물 23만 3,000여 개 등 약 27만 1,000여 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노후 안전시설의 교체 투자 및 안전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최대 5조원 규모의 '안전투자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노후 안전 관련 시설에 대해 RTL(Rehabilitate-Transfer-Lease), RTO(Rehabilitate-Transfer-Operate) 방식으로 보수·보강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규제 개선으로 건설투자 유인

정부는 경제혁신3개년계획의 핵심 과제로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 활성화 대책"을 확정·발표(2014. 8. 12)했는데,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 개선으로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 금번 대책의 핵심으로 보인다. 대규모 건설투자를 유발하는

사안은 다음과 같다.

복합 리조트 개발사업으로 영종도의 LOCZ사(2.2조원), 파라다이스사(1.9조원), 드림아일랜드(2조원)가 있고 제주도에 신화역사공원(2.6조원) 등이 있다. 또한 경기도 화성의 송산 그린시티 부지에 대한 국제테마파크 유치 사업은 공모 방식의 도입과 같은 제도 개선과 인센티브를 마련해서 글로벌 테마파크 유치를 재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산지관광특구제도'를 도입하여 휴양형 호텔의 조성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를 일괄 완화하여 스위스나 미국 등과 같이 유명 산악 호텔의 건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설악산, 남산 등 유명 산지에의 접근성을 높이고 환경도 보전하는 방향으로 친환경 케이블카를 설치키로 했다. 파리 세느강, 런던 템즈강과 같이 한강을 관광 자원화하기로 했다.

관계 부처, 서울시 등과 합동으로 한강 및 주변 지역 관광 자원화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환경 생태를 회복하면서 볼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가 복합된 관광 및 휴양 명소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강 숲 조성, 전시장 및 공연장 확충, 한강 하중도에 문화시설 조성, 다양한 형태의 선박을 이용한 유람선 경쟁 체계 도입 등을 검토키로 했다.

■ 이 슈 진 단

유망 서비스산업 투자 활성화 대책의 주요 과제

구분	성과 구체화 프로젝트	제도 개선·기반 조성
보건·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지원 투자 개방형 외국 병원 유치 의과대학 산하 기술자주회사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 환자 유치 의료 분야 해외 진출 확대 보건의료 연구 활성화
관광·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복합 리조트 설립 지원 공공기관 부지를 활용한 국제테마파크 유치 남산, 설악산 등 친환경 케이블카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 관광객 친화적 관광 환경 조성 한강 주변 지역 관광 자원화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 분야 특화 외국 교육기관 유치 대학기술자주회사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사내대학 활성화
금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 금융 지원 유망 서비스산업 지원 펀드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퇴직연금제도 개선 지주회사 전략 가능 활성화
물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류단지 공급 확대 인천공항 물류 허브 기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 물류기업 육성 택배산업 선진화
소프트웨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SW 융합 클러스터 조성 SW 융합 신산업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 농수산물 전용 공영 TV홈쇼핑 채널 신설 SW기업 해외 진출 확대

자료 : 관계부처 합동,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 2014. 7. 24.

물류 인프라 확충도

물류 인프라 확충과 물류산업 육성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우선 경기, 전북 등 실수요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물류단지를 추가로 지정하고, 고속도로 휴게소의 배후 부지를 활용하여 고속도로 IC를 통과하지 않고도 접근이 가능한 물류시설을 확충키로 했다. 부산, 인천, 평택, 당진항의 항만 배후단지에 대한 입주 수요는 높으나 현재 조성된 부지만으로는 포화 상태에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의 배후단지 수요 증가에 부합하여 배후단지의 조기 공급 및 공급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그리고 민간투자사업을 활용해서 부두시설 확충 등 항만의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한편, 나진-하산 프로젝트인 남·북·러 물류협력사업을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선도 프로젝트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은행은 기준 금리를 종전 2.50%에서 0.25% 포인트를 인하한 통화정책(2014. 8. 14)을 운영키로 했다.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 규제 개혁을 통한 민간의 투자 환경 개선과 더불어 금리인하 효과가 맞물리면서 내수 경기 활성화에 대한 시너지효과가 기대된다. 금리가 하락하면 일반적으로 소비와 투자가 증가하여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발생한다.

SOC 재정 투자 확대 필요

최근 전방위적으로 경기 부양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런데 이들 정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국회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BTL 민간제안 허용이나 대상 시설 확대를 위해서는 「민간투자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국회가 움직여주지 않으면 이들 정책은 무용지물이 된다.

금번 대책들은 재정 확대보다는 싼 이자에 대출을 많이 해주는 금융 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시장에서 투자를 위한 대출이 실제로 발생할지는 불확실하다. 투자는 할 만해야 하는 것이다. 국내보다는 해외 투자를 선호하는 경향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우호적인 국내 투자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전향적인 규제 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서비스업 투자 활성화 대책에서도 투자 여건 개선을 위한 규제 개선을 포괄하고 있는바 이들 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이 필요하다.

각종 인프라 건설 과정에서의 경기 활성화와 해당 인프라를 통한 경제·사회적 효용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공공재적 특성을 갖고 있는 인프라는 정부가 공급과 관리를 책임지고 있다. 현재의 재정 여건상 민간 투자를 적극 활용하여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이다. 그러나 자칫 민간 투자에만 의존할 경우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 적용되는 민자시설의 특성상 저소득층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고, 국가의 재정 부담도 증가하게 된다. 이에 따라 재정 확대를 통한 인프라 확충에 여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CERIK